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차례

요약	3
전반적인 평가	4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6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8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10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12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15

요약

- 본 보고서는 2017년 국방 예산안의 주요 문제사업에 대해 분석한 예산 의견서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음.
- 국방비는 매년 증액되어, 2017년 국방 예산은 사상 최초로 40조 원을 넘었음. 한국은 복지비 지출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전 세계 10위 규모로 지출하고 있음.
-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음.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임.
-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함.
-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해야 함.
-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삭감해야 함. 또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함.
-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전반적인 평가

현황

- 국회에 제출된 2017년 국방 예산안은 40조 3,34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5,352억 원, 4% 증가했음. 이는 전체 예산안의 약 10%에 해당함.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40조 원을 넘었음.

<표1> 2017년 국방 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안)	증감 (B-A)	증감 (%)
계	38조 7,995	40조 3,347	1조 5,352	4.0
○ 전력운영비	27조 1,597	28조 1,757	1조 160	3.7
○ 방위력개선비	11조 6,398	12조 1,590	5,192	4.5

-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운영비는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주요 정책현안 대응'의 방향에 따라 편성되었음.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의 방향에 따라 편성되었음.
- 국회의 2017년 예산안 심사 직전인 10월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위력 증강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 등을 이유로 방위력 증강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방 예산 증가를 주장함.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정보복(KMPR) 체계 전력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까지 앞당기겠다고 발표함. 김광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국방부는 현재 예산안에서 7,124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함.

모호한 위협 분석

- 국방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음. 전면전 대비라는 차원에서도 이미 과잉 투자된 분야에 대해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국방부의 위협 분석과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 국방부가 강조하는 '비대칭 위협'은 통상 군사적으로 혹은 군사비에서 열세에 있는 쪽이 일

부 분야에서 비대칭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즉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상당히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위협 분석임. 국방부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재래식 전면전 위협과 이를 위한 북한의 군사력은 약화되었다는 평가와 다를 바 없음.

-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의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 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 역시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수준에서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역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한국군의 전면전 대비 전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과도한 육군 병력, 장교 수, 기갑 장비,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해·공군력 분야에서 군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 2011년 이후 국방 예산은 매년 평균 4.5%가량 증가했음.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비의 연평균 5%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은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지만,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 역시 매년 증대되고 있음.
- 남한은 이미 북한의 총 GDP 규모에 달하는 군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비는 제외한 수치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저히 군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임. 따라서 문제는 신뢰이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님. 대화나 협상 없이 군사력 확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국가에서 2015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음. 군사비 확장은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함.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님.
- 이런 관점에서 국회의 국방 예산안 심사 시 어느 정도가 적절한 대북 역지력이고 방어 충분 전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예산 심사도 전에 국방부의 예산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것임.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비대한 병력 불필요

- 전력운영비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중 군 구조 개편, 상비 병력 규모,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의 추진 상황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규모를 52.2만 명으로 수정함. 이어 2015년에는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됨. 병력 감축 시기를 연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
- 부대 개편 계획 역시 <2006~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 군단 6개, 사단 24개에서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 군단 6개, 사단 31개로 후퇴함.
-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등의 이유로 병력 감축을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음.
-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 감축안이 다수 제기된 바 있음.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병력을 2015년까지 40~50만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했음.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 체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건의하려 했음.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 출신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18대)이 35만 명으로의 감축을 주장한 바 있음.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는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축을 주장함.
- 군이 현재와 같은 비대한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임. 이는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전략임. 그러나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임.
- 저출산에 따라 징병 대상 인원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통계청에 따르면 만 20세~24세 남성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22년에는 30만 명 이하로 급감할 예정임.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2.2만 명으로 감축해도 2025년부터 매년 2만~3.5만 명의 병력 부족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병력 부족은 이미 예고된 일이며

이에 걸맞는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함.

턱없이 낮은 사병 급여

- 전력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로, 전체 국방 예산의 약 37%에 달하는 14조 9,804억 원(법정부담금 포함)이 인건비로 배정됨. 비대한 병력 규모와 많은 장교 숫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임.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간부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 장교·부사관·병 인건비 모두 전년 대비 증액 폭이 큼. 장교 인건비는 처우개선 등 명목으로 약 1,437억 원, 부사관 인건비는 증원과 처우개선 등 명목으로 약 3,036억 원 증액되었음. 한편 병 인건비는 봉급 인상과 1만 명 추가 입영 등으로 약 735억 원 증액됨.
- 2015년 기준 한국군 규모는 65만 5천 명으로, 이중 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임.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병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10%인 반면, 병력의 11% 수준인 장교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중 약 41%를 차지하고 있음. 징집된 병들은 현행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7에도 못 미치는 턱 없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음.

<표2> 2017년 급여정책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비고
군인 인건비	장교 인건비	4,065,512	4,209,234	처우개선 1,456억원 등
	부사관 인건비	4,767,235	5,070,910	부사관 증원 947억원, 처우개선 1,981억원 등
	병 인건비	973,659	1,047,205	봉급 9.6% 인상 867억원, 1만 명 추가입영 48억원 등
군무원 인건비		1,549,146	1,604,604	처우개선 543억원 등
공무원 인건비		54,746	54,510	처우개선 18억원 등
건강보험부담금		269,066	278,483	
합계		11,679,364	12,264,946	

출처 : 「2017년도 예산안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6.10.

-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급선무이며, 비대한 병력 규모를 축소하고 간부 숫자를 줄이지 않고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움. 예산 심사 시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함.

1 「2017년도 예산안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6. 10.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 파병 예산

<표3> 해외파병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증가율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해외파병	49,809	46,391	46,391	44,604	44,558	△1,833	△4.0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23,712	22,531	22,531	23,143	23,121	590	2.6
PKO 파병	26,096	23,860	23,860	21,461	21,437	△2,423	△10.2

파병 당위성 재검토 필요

-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장되고 있음.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분쟁지역, 상업적 목적의 파병임. 또한 그동안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매년 파병이 연장되고 있음. 아크부대는 철군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
-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음.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이제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임. 청해부대는 철군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야 함.
- 레바논과 남수단 파병 역시 파병 연장에 앞서 해당 지역에서 군대가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최근의 안보 개념은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도 전에 파병 연장 전제로 예산안 통과

- 해외 파병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청해부대 등 4개 부대의 파견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음. 그러므로 해당 부대를 2017년에도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연장 동의가 있어야 함.
- 그러나 매년 국회의 파병 연장 동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파병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먼저 통과되어왔음. 이러한 절차 문제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결위, 상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술하게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2017년 9,354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 제공할 예정임.

<표4>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증가율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방위비분담금	857,110	913,259	913,259	950,684	935,473	22,214	2.4
인건비	349,000	362,995	362,995	365,540	365,540	2,545	0.7
군사시설개선	314,159	391,798	391,798	424,950	409,739	17,941	4.6
연합방위력증강	17,567	0	0	0	0	0	0.0
군수분야	176,384	158,466	158,466	160,194	160,194	1,728	1.1

매년 과다한 이월·불용액 발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 예산에서 매년 과다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함. 2012년 약 1,948억 원, 2013년 약 1,320억 원, 2014년 약 380억 원, 2015년 약 340억 원이 다음 해로 이월되었음. 이월의 이유는 ‘미측 설계변경’, ‘미측 설계지연’, ‘착공 및 준공지연’ 등임.
- 2013 회계연도 국회 예·결산 심사 시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사업에서 과다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방위비분담금 미사용액 우선 집행 및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 요구되었음.
- 매년 미사용액이 발생함에도 매년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증액되고 있음. 예산 심사 시 전년도 미사용액만큼 삭감하거나 미사용액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삭감해야 함.

<표5>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미사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이·전용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미사용액
2012	225,164	△25	194,836	43,344	238,205
2013	235,462	△25	132,021	1,016	133,062
2014	297,302	2,120	38,027	4,359	42,386
2015	337,334	△17,935	34,065	9,202	61,202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예산 등으로 전용 가능성

-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개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했음. 현행 협정 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과 군수분야 예산은 사드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 있음.
- 지난 7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사드 포대 건설에 미군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측이 그런 소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한 바 있음.
-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 전용임. 그동안 미군은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적립했다가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해왔고, 한국 정부도 이를 용인해온 바 있음.
- 2017년 방위비분담금 세부 항목에 사드 배치에 따른 예산 소요가 있거나 추가되는지 예산 심사 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표6> F-35A 도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증가율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F-35A	361,432	598,889	598,889	1,039,010	987,060	388,171	164.8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총 사업비 약 7조 8천억 원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구매하는 것임.

공격형 무기 도입의 위험성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킬 체인 능력을 구비하고자 함. 그 일환으로 공격형 무기인 차기 전투기(F-35A)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임. 이에 따른 공격형 무기의 대규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큼.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은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임. 그러나 남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력은 더욱 우세함.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60%인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구형 전투기임. 따라서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된 F-35A 도입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함.
-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의 운용유지비는 구매비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

정했으나,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함.

-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는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구매국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임. 상한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떨지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선지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애초 제기된 차기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으나 F-35A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는 애초 소요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전력공백 최소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핵심 기술 이전 불가

-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4건의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알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 방위사업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F-35A 도입과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 F-35A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지난 9월 미 공군은 이미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음. 2014년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기종의 시험 비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비상 상황 조종석 사출 실험 실패, 열에 취약한 무기장착고,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속도를 마하 1.2로 떨어뜨려야만 무기 발사가 가능한 문제 등 수많은 치명적인 성능 결함들이 제기되어왔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종이라는 평가도 많음. 미 회계감사원(GAO) 역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엔진 결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이처럼 F-35A는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은 기종임.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자질구레한 결함”이

라고 일축했음. 이는 매우 안일한 태도임.

- 미국 국방부는 2017년 7월 말로 예정된 F-35 개발 시험 완료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며 1년가량 늦춰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상황임. 개발 비용 증가로 한국의 구매 비용이 증가하거나, 2018년 최종 성능 평가도 거치지 않은 무기를 떠안게 될 수도 있음.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정부가 최근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함.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표7> 보라매(R&D)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증가율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보라매(R&D)	74,512	67,000	67,000	303,000	303,000	236,000	452.2

보라매(R&D) 사업은 총 사업비 약 8조 8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전투기(KF-X)를 2028년까지 개발·양산하는 것임.

타당성 없는 개발 사업

-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2003년부터 총 7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의 조사 한 번임.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내 기술 수준이 낮고 비용,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개발비가 10조에 이르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생산 예산이 최초 예측치인 12조 원보다 3~4배 더 드는 것으로 평가함. 국방연구기관들이 모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사업을 강행함.
- KF-X 타당성 조사에 5번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는 2015년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리스크가 높다, 실패할 경우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것이 우려된다”고 답했음.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 성공 가능성 불투명

- 한국형 전투기 국내 개발 성공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임. 우선 작전 요구 성능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라팔 전투기 개발 사례에만 비추어보아도 15년 만에 개발·양산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사업비도 폭증할 가능성이 큼.
- 애초 미국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음. 그러나 핵심기술 이전 불가로 개발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2016년 예산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 핵심기술 미확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바, 사업추진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670억 원 전액 감액 (권은희, 서기호 위원)

- 사업파트너인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 필요금액을 제외한 550억 원 감액 (김성주, 박혜자 위원)
- 부대의견 “보라매 사업과 F-X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기술 확보 실패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 (권은희 위원)

F-35A 도입 철회와 함께, 보라매 사업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함. [\[참\]](#)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7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

발행일 2016. 10. 31.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황수영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